

조세 재정

2016. 5. 27(통권 제29호)

BRIEF

미국 예산안 분석 및 평가

이상엽 연구위원
한종석 부연구위원



BRIEF

미국 예산안 분석 및 평가

이상엽 연구위원(044-414-2257)
한종석 부연구위원(044-414-2415)

I. 경제·재정 전망 및 예산기조	02
II. 주요 세입 정책	05
III. 주요 세출 정책	10
IV. 요약 및 평가	14



I 경제 · 재정 전망 및 예산기조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은 '16년, '17년 모두 2.6%로 FY2016 예산안 전망치보다 다소 하향 조정
 - CBO도 '16년~'18년 경제성장률을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노동시장) 실업률은 '15년 4분기 전후로 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비농업(non-farm) 부문의 경우 '15년 기준 월평균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물가) 최근 18개월 동안 유가와 비석유제품(non-petroleum) 수입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으로 낮은 물가 수준 지속
 - 낮은 수준의 물가는 '17~'18년 동안 2.0% 수준의 정상인상률(normal rates of increase)을 회복한 후 2.3%대로 지속·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1〉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¹⁾	2.4	2.4	2.6	2.6	2.6	2.4	2.3	2.3	2.3	2.3	2.3	2.3	2.3
실업률 ²⁾	6.2	5.3	4.7	4.5	4.5	4.6	4.6	4.7	4.7	4.8	4.9	4.9	4.9
CPI-U ¹⁾	1.6	0.1	1.5	2.1	2.1	2.1	2.3	2.2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³⁾	*	*	0.7	1.8	1.8	2.6	3.1	3.3	3.4	3.4	3.3	3.3	3.3
국채 10년물	2.5	2.1	2.9	3.5	3.5	3.9	4.1	4.2	4.2	4.2	4.2	4.2	4.2

* 0.05 percent or less

주: 1) 전년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Analytic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나. 재정 전망

- (총수입) 전년 대비 9.2%(3,336억달러) 증가한 3조 6,440억달러(GDP 대비 18.9%) 전망
- (총지출) 전년 대비 약 5%(1,960억달러) 증가한 4조 1,470억달러(GDP 대비 21.5%) 편성
 - (재량지출) FY2017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2,330억달러 전망
 - (의무지출) FY2017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조 6,060억달러 전망
 - 사회보장지출 전년 대비 4.6%, 메디케이드 5.1%, 메디케어 1.5% 증가할 전망
 - (기타 지출) 순이자지출(net interest)과 재난조정비용으로 총 3,090억달러 소요 계획
- (재정수지) 전년(6,160억달러)대비 18.3% 감소한 5,030억달러(GDP 대비 2.6%) 적자 전망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4조 1,290억달러) 대비 4.5% 증가한 14조 7,630억달러(GDP대비 76.5%) 전망

〈표 2〉 미국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총량												
수입	3,249	3,396	3,644	3,899	4,095	4,346	4,572	4,756	4,949	5,177	5,411	5,669
지출	3,687	3,951	4,147	4,352	4,644	4,880	5,124	5,415	5,626	5,827	6,152	6,462
재정적자	439	616	503	454	549	534	552	660	677	650	741	793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3,117	14,129	14,763	15,324	15,982	16,615	17,264	18,016	18,793	19,548	20,396	21,302

〈표 2〉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총량												
수입	18.2	18.1	18.9	19.4	19.5	19.8	20.0	19.9	19.9	19.9	20.0	20.0
지출	20.7	21.4	21.5	21.6	22.1	22.3	22.4	22.7	22.6	22.4	22.7	22.8
재정적자	2.5	3.3	2.6	2.3	2.6	2.4	2.4	2.8	2.7	2.5	2.7	2.8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3.6	76.5	76.5	76.1	76.1	75.8	75.5	75.5	75.4	75.2	75.2	75.3

주: 2015년 실적규모는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6 to 2026, CBO, 2016.1」수치를 인용
출처: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다. 예산기조¹⁾

- ● 기후 변화 및 질병치료 과제를 직시하는 한편, 혁신가속(accelerating the innovation)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미래를 대비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관련 R&D와 암치료 개발과 같은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제시
- ● ‘중산층 경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기회 보장(opportunity for all)
 - 중산층 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공정하게 경쟁할 때 국가가 최상의 발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오바마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 ● 사이버 안보 및 대테러 위협 등에 대한 안보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편성
 - 최근 발생한 국제무장 테러단체에 대한 방어/퇴치와 함께 정보 유출 및 기술 탈취 등이 가능한 사이버 테러 대비에 대한 대대적 지원

1) '15년 가을에 합의한 양당의 예산안인 '15년 초당적 예산법(2015 bipartisan budget agreement)을 토대로 설정

II 주요 세입 정책

가. 세입 전망

- (총수입) 전년 대비 9.2% 증가한 3조 6,440억달러(GDP 대비 18.9%) 전망
 - FY2018에는 약 7%의 증가율을 보여 FY2019에 최초로 재정수입 4조달러 규모(4조 950억달러) 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분야별 수입 전망
 - (개인소득세) 전년 대비 9.8% 증가한 1,788억달러 전망
 - (법인세) '16년 감소에서 '17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한 419억달러 전망
 - (소비세) '16년 감소에서 '17년 증가로 선회하여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10억 달러 전망

〈표 3〉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추정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개인소득세	1,541	1,628	1,788	1,891	1,985	2,106	2,222	2,339	2,461	2,586	2,716	2,853
법인세	344	293	419	493	525	575	582	554	537	546	556	568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1,065	1,102	1,141	1,191	1,240	1,287	1,352	1,417	1,478	1,547	1,613	1,695
소비세	93	97	110	143	153	165	178	189	193	196	201	206
유산세 및 증여세	19	21	22	32	34	37	40	43	47	51	55	60
관세	35	37	40	40	41	42	44	45	47	48	49	50
기타수입 (연방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포함)	147	159	123	102	98	105	114	124	131	139	148	162
이민개혁 총당금	-	-	1	7	20	30	40	45	55	64	74	84
총 재정수입	3,250	3,336	3,644	3,899	4,095	4,346	4,572	4,756	4,949	5,177	5,411	5,669
GDP 대비 %	18.3	18.1	18.9	19.4	19.5	19.8	20.0	19.9	19.9	19.9	20.0	20.0

*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출처: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나. 제안된 주요 세법 개정안²⁾

● 국제조세 개혁 조치

- 해외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미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U.S insourcing) 이전하는 데 발생한 적격비용의 20%를 세액 공제할 것을 제안
-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19%의 세율로 즉시 과세할 것을 제안
- 과거 과세되지 않고 누적된 해외자회사(CFC) 소득에 14%의 세율로 한시적 과세할 것을 제안
- 무형자산이전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행위를 제한하고자 무형자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
- 보험회사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보험계열사에 재보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
- 미국 파트너십의 외국파트너가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지분취득자가 판매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할 것을 제안
- 혼성계약(hybrid agreement)에 의해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거나(stateless income), 이중 공제가 되는 경우의 이자, 로열티 지급액은 비용 공제를 부인할 것을 제안
- 미국기업의 해외이전을 제한하고자 ‘인버전규정’³⁾의 2가지 개정안을 제안
 - 지분율기준 수정: 기존의 지분율 80%기준을 50%기준으로 변경, 60%기준 폐지 제안
 - 인버전거래 간주규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버전거래로 간주하여 과세
 - 내국법인의 주식공정가치가 외국법인의 주식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 합병법인의 모든 관계사(expanded affiliated group, 이하 EAG)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통제되는 경우
 - EAG가 해외모회사가 설립된 곳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17년 예산안은 '16년 예산안에서 제안되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다수의 제도를 다시 제안

3) 미국기업이 외국기업과 합병을 통해 기존의 미국 본사를 조세상 유리한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4년에 제정한 규정임. 기존 미국기업의 주주가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도 미국법인으로 보며, 지분이 60-80%인 경우 새로 설립된 해외모회사의 일정소득을 과세할 수 있음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조세혜택

- 소규모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감가자산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공제한도를 100만달러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물가에 연동시킬 것을 제안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비용(start-up expenditures) 공제한도를 기존 5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
 - 사업개시비용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현행 제도를 초과금액 기준도 12만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
- 고용주가 대신 지급한 종업원 건강보험기여금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
 - 종업원 수가 25인 이하인 고용주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50인 이하로 확대하고, 세액공제금액의 단계적 축소 기준인 종업원 수도 기존 10~20인에서 20~50인으로 상향조정

●●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것을 제안
-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3년간 적격 연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율을 낮춰 6%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

●●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영구화 및 신규제도 도입

- 고용창출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⁴⁾) 제도 영구화와 WOTC가 적용되는 장애인인 채용대기기간 단축을 제안
- 장기적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투자 지원을 위해 특정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

4) WOTC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가 적격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 첫째 임금지급액의 40%를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세액 공제하는 제도임

- (대규모 실업 정의)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철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회사를 철수하거나, 회사의 상당한 운영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구체적인 내용(투자종목, 세액공제율, 금액한도) 등은 의회와의 작업을 통해 향후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
 - 커뮤니티컬리지 또는 기술대학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5,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 빈곤지역을 약속지대(promised zone)⁵⁾로 선정, 해당 지역 거주자를 신규고용하거나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할 것을 제안
- ● 클린에너지를 위한 세액공제 영구화 제안
 - 재생전기에너지 생산 세액공제제도 영구화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용 빌딩(energy-efficient commercial building) 비용공제제도 영구화
 - 제2차 바이오연료(second generation biofuel) 생산관련 세액공제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
 - 첨단에너지제조(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project) 관련 추가적인 세액공제 허용
 - 기존에 전기차 제조에 세액공제하던 것을 첨단차량 제조(advanced technology vehicle)에 대한 세액공제로 대체
- ● 지역성장을 위한 세액공제 영구화
 - 저소득지역사회를 장려하기 위한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⁶⁾’을 영구화하고, 2019년 이후로 매년 500만달러의 예산을 할당할 것을 제안

5) 현재 약속지대로 선정된 지역은 20곳이며, 2014년 1월 9일에 5곳, 2015년 4월 28일에 8곳, 2016년 3-6월 중 7곳을 발표할 예정임

6)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y; CDE)의 적격지분(qualified equity investment; QEI)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9%만큼 7년 동안 세액공제하는 제도, '19년 일몰 예정

●● 기반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도입

- 기반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패스트 포워드 채권(fast forward bond)'의 도입 제안
 - 주로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 자금조달,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의 상환, 일시적인 정부의 운전자본 조달 이용될 예정
 - 연방정부가 28%의 이자(coupon interest)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전통적 정부채권 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연금펀드나 외국투자자들의 자금유치를 기대
- 새로운 비과세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인 '적격 공공기반시설 채권(Qualified Public Infrastructure Bonds; QPIBs)'의 도입 제안
 - QPIBs로 수행되는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운영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2017년부터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

●● 종산층 및 근로자 가계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자녀양육비용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지원액 인상 제안
 - (현행 제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용의 35%를 1자녀의 경우 3,000달러, 2자녀 이상인 경우 6,000달러 한도로 세액공제
 - ('17년 예산안) 공제율이 감소하는 조정된 총소득 기준을 15,000달러에서 120,000달러로 상향 조정,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50%의 공제율 적용 제안
- 현행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환급가능한 교육비용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⁷⁾로 대체 및 적용대상을 확대 제안
-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가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한도액 2배 확대 제안
- 맞벌이부부에게 연 10,000달러를 한도로 소득의 5%만큼 세액공제하는 '맞벌이부부 추가세액공제(second earner tax credit)'를 도입 제안

7) 대학교육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용의 2,000달러까지 100%, 다음 2,000달러까지 25%, 교육관련 비용금액을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 고소득층 과세 강화

- 소득세율이 33% 이상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의 소득공제금액 제한을 제안
 - 조정된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각종 공제항목(이자비용 공제, 고용주제공 건강보험공제, 퇴직연금 불입액 등) 합계액이 총 과세소득의 28%를 넘지 않도록 제한
- 고소득자의 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20%에서 24.2%(고소득자의 순투자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3.8% 포함 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
- 조정된 총소득이 가계기준 100만달러 이상(부부개별신고 시 5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공정분배세(fair share tax; FST)를 부과하도록 하는 버핏룰 시행을 제안
- 현행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이전세의 세율 및 공제한도를 2009년 기준에 맞춰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통합공제한도를 축소할 것을 제안⁸⁾
 - 최고세율은 유산세, 세대생략이전세, 증여세(gift tax) 모두 '09년 당시 45% 수준으로 인상
 - 면제금액(exclusion amount)도 '09년 당시 수준(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00만달러)으로 인하

III 주요 세출 정책

가. 세출 전망

- ● (총지출) 전년 대비 4.9% 증가한 4조 1,472억달러(GDP 대비 21.5%) 전망
 - 전년도에 비해 GDP 대비(21.4%) 0.1%p 증가한 수치
 - 보건 분야(Health),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23.5%) 등을 합한 지출이 총지출의 51.7% 차지

8) 미국의 유산·세대생략세는 2010년에 잠정폐지되었다가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RUIRJCA)」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으며, 폐지 전 제도보다 최고 세율이 인하되고, 통합공제한도금액도 증가함

● ● 분야별 지출

- (국방) 전년 대비 2.1% 증가한 6,17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4.9%
 - 사회보장 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
- (보건) 전년 대비 7.9% 증가한 5,67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3.7%
 -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은 보건분야 총지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의 높은 증가율(7.9%)에 기인
- (사회보장⁹⁾) 전년 대비 4.6% 증가한 9,72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3.5%
 - 예산외(Off-budget) 지출비중이 사회보장 총지출의 96%(9,330억달러) 차지
- (메디케어¹⁰⁾) 전년 대비 1.6% 증가한 6,05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4.6%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전년 대비 약 5.6% 감소한 1,07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6%
 - ‘초·중·고 및 직업교육’과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예산이 각각 3.3%, 23.9% 감소한 것이 특징이나 FY2018에 다시 5.9%, 31%로 높게 반등하는 것으로 계획

〈표 4〉 부문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583	595	608	589	591	597	603	602	614	626	638	650
비안보	581	627	625	629	635	639	646	651	660	671	684	698
소계	1,165	1,223	1,233	1,219	1,226	1,236	1,249	1,253	1,274	1,297	1,322	1,348

9)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10)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의료지원 제도

〈표 4〉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882	924	967	1,025	1,089	1,156	1,223	1,295	1,375	1,452	1,536	1,624
메디케어	540	589	598	601	656	695	744	833	857	870	974	1,030
메디케이드	350	367	386	405	426	450	474	501	528	559	593	631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29	607	651	700	764	790	831	878	887	897	934	983
이민개혁 총당금	-	-	5	10	15	20	20	25	30	35	40	50
소계	2,301	2,487	2,606	2,741	2,950	3,112	3,292	3,532	3,675	3,813	4,077	4,318
순이자	223	240	303	385	460	523	574	621	668	706	744	787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2	6	8	8	9	9	10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688	3,951	4,147	4,352	4,644	4,880	5,124	5,415	5,626	5,827	6,152	6,462
GDP 대비 %	20.7	21.4	21.5	21.6	22.1	22.3	22.4	22.7	22.6	22.4	22.7	22.8

출처: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나. 주요 정책

- (미래 대비 경제 혁신) R&D, 21세기형 교통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
 - (R&D) 기존의 경제생산성 향상 목표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총 1,520억달러 배정
 - (클린 에너지) 변혁적(transformative) 클린 에너지 관련 R&D 및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0% 증가한 77억달러 배정
 - (제조업 활성화) 중·소 제조업 기술 훈련 및 제조업분야 혁신을 담당할 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 연구에 20억달러 배정
 - (생체의학 발전, advancing biomedical research) 국립보건원 생체의학 연구 지원에 330억 달러 배정

- (농·식품 연구) 농업의 도전과제에 대비하고 글로벌 농업연구의 선도를 목표로 한 과학·기술과의 결합 농업·식품 연구(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에 7억달러 등 농업 관련 리서치에 총 29억달러 배정
- (기초연구 지원)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성(DEO) 및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기초연구(basic research) 지원에 전년(enacted level) 대비 9억달러 증액된 146억달러 배정
- (21세기형 교통 시스템 구축) 석유 의존도(reliance on oil) 및 탄소오염(carbon pollution)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교통(clean transportation) 시스템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20억달러(총 3,200억달러) 지출 계획
- (기후변화 대응) 최근 10년간 극심한 기후 및 화재로 인한 연방정부의 직접적 비용은 약 3,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에 기후변화 관련 다방면 사업에 예산 책정
 - (연안 대처, coastal resilience)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해안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배정
 - * 최근 10년간 극심한 기후와 산불로 인해 초래되는 연방정부의 직접적 비용은 약 3,50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홍수대처, flood resilience)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에 3억 1천만달러를 배정하여 국가 홍수 지도(nation's flood maps) 관련 최신 정보로 교체 계획
- (기회보장) 조기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를 대상으로 한 미래 대비 교육과 일자리 교육 및 보호에 대한 지출 배정
 - '15년 12월에 발효된 주 및 지방정부에 전 방위적인 학교 개선과 교사 평가 권한 등을 부여하는 「모든 학생 성공법¹¹⁾(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토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694억 달러 배정
 - 교사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교사 및 보직자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2억 5천만달러를 포함하여 총 28억달러 배정
 - 학자금 지원 행정 및 학자금 계약업체의 양질의 서비스 달성 등을 위해 연방학자금지원실(Office of Federal Student Aid)에 16억달러 배정

11) 기존에는 10년 전 부시행정부에서 입법된 'No child left behind act(낙오학생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시한 가이드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야 했었음

- 6개월 이상 실직상태자 또는 일용직(part-time)에만 머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센터의 경력도우미(career navigator)를 통해 일자리 연결 지원에 15억달러 주정부에 배정
 - 학교 또는 직장의 기회를 놓친 청년(youth)들의 첫 일자리 취득(약 15만명 이상)을 위한 지원에 약 20억달러를 배정, 여름인턴을 포함한 유료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15억달러 배정(총 35억달러 편성)
 - 탁아 프로그램(child care)을 통한 중·저소득(low and moderate) 근로가구의 고용상태 및 수입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820억달러 배정
- ● (국가안보) ISIL(이슬람 무장단체) 격퇴와 사이버 안보 관련 예산 배정
 - 자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는 이념하에 ISIL 격퇴 등이 포함된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OCO) 예산에 총 590억달러 배정
 - 구식 하드·소프트 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 기타 관련 사이버 인프라 교체 및 직원들의 사이버 안보 교육 등 진화한 현대식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 증가한 190억달러 배정

IV 요약 및 평가

- ● 주요 세법개정안 제안 내용
 - 국제조세 개혁 : 해외소득 과세 강화, 미국 내 사업장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존의 조세혜택 폐지 및 신규 조세혜택 부여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조세혜택 : 사업개시비용 공제한도 인상, 감가상각비용 공제한도 인상
 -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혜택 : 특정 계층 신규고용기업에 세액공제혜택 확대, 커뮤니티컬리지·기술대학 졸업생 채용 시 세액공제제도 신규 도입
 - 기반시설투자 확대 : 정부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채권, 비과세 채권의 신규 도입
 - 중산층 및 근로자 가계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 자녀양육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고소득층 과세 강화 :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 유산·증여세 최고세율 인상 및 통합공제한도 금액 축소, 소득세율이 33% 이상인 납세자의 공제금액 제한

●● 주요 지출 정책 내용

■ 미래 대비 경제 혁신

- (R&D) 경제생산성 향상 목표와 일관되게 FY2017의 R&D 지원예산에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총 1,520억달러 배정
- (21세기형 교통 시스템) 석유 의존도(reliance on oil) 및 탄소오염(carbon pollution)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교통(clean transportation) 시스템 투자 등 향후 10년간 연평균 320억달러 지출 계획
- (기후변화 대응) 탄소오염을 줄이고 양자 및 다자간의 국제기후변화 공조체계 지원을 위해 13억 달러 책정

■ 기회보장

- (교육) 주 및 지방정부에 각 관할 학교의 개선 및 교사 평가를 부여하는 교육지원에 총 694억 달러 배정
- (일자리 교육 및 보호) 실직자 또는 학교, 직장의 기회를 놓친 청년(youth)구제,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환경 개선, 중·저소득 근로가구의 고용상태 개선을 위해 예산 배정

■ 국가안보

- (국제테러) ISIL 격퇴 등이 포함된 해외비상작전 예산에 총 590억달러 배정
- (사이버 테러) 현대식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 증가한 190억달러 배정

●● (평가) 제안된 주요 세법 개정안과 주요 지출 정책은 (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2) 기회 보장, (3) 안보 강화 등으로 구성된 예산 기초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세입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등과 같이 세액공제를 통한 기술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을 실시하고, 세출측면에서는 기초연구, 클린 에너지 분야, 생체의학분야 등에 R&D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구성
- (기회보장) 세입측면에서는 중산층과 근로자 가계에 대한 세액공제(EITC, AOTC, CDCTC 등)는 확대 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조기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투자 확대와 일자리 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구성

- (기타) 세입측면에서는 국제조세 개혁 조치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으로 제안된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안보관련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적
- 이번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지출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의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하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가능

| 참고문헌 |

- Fiscal Year 201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6 to 202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6.1.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2.9.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6 to 2026, CBO, 2016.1.



BRIEF

미국 예산안 분석 및 평가

2016. 5. 27(통권 제29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주)참기획
-

